‘포용국가’ 실현 머리 맞대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 전략토론회’ 개최
전북도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사회통합 강화 강조 · 공교육 확대 등 제안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토론회’가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분야별 전문가, 시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의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회복지, 고용 · 일자리, 사회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 이상록 교수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을 지적하며,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 · 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포용국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가치”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 · 지역 · 계층 ·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의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토론회가 21일 전주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우 “靑특감반, 내근직에 출장비… 법 위반”

“허위출장서 지급… 예산 횡령”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전 특별감찰반 파견)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000만원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 인사검증 실패 사례”라며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2017년 9월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2일에도 추가 보고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안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뉴시스

임종석 · 한병도, 청와대로 ‘컴백’

문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 임명… 임 ‘UAE’ · 한 ‘이라크’

임종석 특별보좌관

한병도 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각각 위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 소식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 전 실장 위촉과 관련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여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 · 안보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특사를 맡아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우리나라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 전 수석의 위촉과 관련해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하여 정무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한 · 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 · 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여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뉴시스

손혜원 “배신의 신공”
VS
박지원 “투기 아이콘”

목포 투기 의혹 관련 설전 격화

전남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간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당의 ‘간판’격인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평화당까지 나서면서 개인과 당의 설전으로 몸집이 커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손혜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부동산 매입이)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느냐”고 비아냥댔다.

그는 “문재인 당 대표 배신하고 나가서 당 만들고, 안철수 후보 대선이 끝나자 바로 배신 · 총 겨누고, 목포 박홍률 시장을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 직전 배신, 다른 후보 공천했다. 어디 이것뿐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이콘’급 배신 경지 정도 경력은 쌓아야 어느 분야든 ‘아이콘’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손 의원은 전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칠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의 뜻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개적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이 태도를 바꾸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조사 가는데 박지원 의원을 빠뜨렸다. 목포 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며 “그 기간에 서산 · 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 서산 · 온금지구 고층아파트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지역 재개발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한 것처럼 의심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